

통권 86호

독립정신

권두언_새봄이 옵니다!

특집1-(1)_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특집1-(2)_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특집2_이성의 마비는 파국을 부른다 : 한반도 핵 군비 경쟁과 핵 선제공격

100년의 시간/그때와 오늘(2)_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친일파와 그 후손들(8)_4.19 혁명정부에 참여한 친일인사들

특별기고_삼일운동이 아니라 삼일항쟁이다

청년독립군이 간다!_청년 대학생이 만드는 역사

기고_'사드' 말고 '평화'를

2016년
3, 4월

김원봉(金元鳳, 1898~1958)

조선혁명 선언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조계로
보아 을사이후 13도의 의병나인 각 지
방에서 일본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천천 등 국내 각지로부터
북강도·서강도·노령·연해주에 이르기까
지 도처에서 주민을 살해하고 촌락을
불사르며,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를 능욕
하였다. 또한 생사립을 산채로 물고, 불
에 살으며 일신을 두 등거리 세 동가
리 내어 죽이고 이통을 약탈하는 등
우리 민족을 공포와 전란 속에 몰아넣
고 참혹한 수탈을 써서 인권의 실욕장
을 만들고자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의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에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책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함 수탈임을
선언하노라.

탄재 신채호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문 중
1923년 1월 조선의일본 신평

김원봉(金元鳳) : 의열단 단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 광복군 제1지대장 및 부사령관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김원봉(金元鳳)



항일 무장 투쟁에 앞장 선 약산 김원봉

1918년에 김약수(金若水)·이여성(李如星) 등과 난징(南京)의 진링대학(金陵大學)에 입학하면서 중국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였다.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귀국하는 김약수·이여성 등과 헤어져 길림(吉林)을 거쳐 서간도에 서 폭탄제조법을 습득하는 등 일제와의 무장투쟁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12월 윤세주(尹世胄)·이성우(李成宇)·곽경(郭敬)·강세우(姜世宇) 등과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고 의백(義伯: 단장)에 피선되었다. 의열단의 암살 대상은 이른바 칠가살(七可殺)에 해당되는 자들로서 조선 총독 및 총독부 고관, 군부 수뇌와 매국적 친일파 거두 등이었다. 6년여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대규모 암살계획 및 경찰서·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대한 폭탄 투척사건 등을 배후에서 지휘 조종하며 테러에 의한 일제와의 투쟁을 지속하였으나, 연합투쟁 및 조직투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황푸군관학교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투쟁노선을 변경하였다.

1929년 상해에서 정치학교를 개설하고 1932년 난징에서 조선인혁명간부학교를 창설하는 데 중국 국민당계의 도움을 받았다. 1933년에는 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여 혁명세력의 결집을 꾀하였고, 1935년에는 신한독립당·한국독립당·대한독립당·조선혁명당·의열단의 5개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민족혁명당(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을 조직하였다.

1938년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동의를 얻어 조선의용대를 편성하고 대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장개석(蔣介石)의 주선으로 김구(金九)와 함께 각 혁명단체가 공동 정강하에 단일조직을 만들 것을 제의하는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서간」을 1939년 5월 발표하였다.

이러한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협력노력은 최창익(崔昌益) 등과 달리 당시의 민족운동은 계급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운동이 아니라, 일본과의 투쟁을 위한 연합전선 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노선에서 출발하였다.

1944년에는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에 취임하고, 광복군 제1지대장 및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 12월 임시정부 귀국시에는 군무부장의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전에 발표된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의 군사부장으로 명단에 올랐으며, 귀국 후 계속 환국한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1946년 6월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인민공화당으로 개칭하고 지속적으로 연합전선구축에 노력하였으나, 여운형(呂運亨)이 암살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화되자 월북하여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세칭 남북협상)에 참가하였다. 그 뒤 북한에서 국가검열상·내각 노동상·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나 1958년 11월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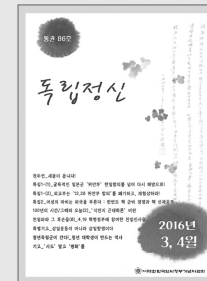
1939년 10월 10일 설립 1주년을 맞은 조선의용대가 중국 계림에서 찍은 기념사진

독립정신

2016 3*4

통권 86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 04 권두언
새봄이 옵니다!
| 김도현
- 08 특집 1_ (1)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 윤미향
- 13 특집 1_ (2)
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 박용규
- 16 특집 2_
이성의 마비는 파국을 부른다 :
한반도 핵 군비 경쟁과 핵 선제공격
| 서재정
- 22 100년의 시간_그때와 오늘(2)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박찬승
- 30 친일파와 그 후손들(8)_
4·19 혁명정부에 참여한 친일인사들
| 최광웅
- 35 특별기고_
삼일운동이 아니라 삼일항쟁이다
| 배다지

- 37 청년독립군이 간대!
청년 대학생이 만드는 역사
| 성희연
- 43 기고
'사드' 말고 '평화'를
| 조화환
- 50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혁명의 강물에 뛰어든 "김알렉산드라"
| 이윤옥
- 52 영화읽기_
영화 <내부자들>과 <특종: 량첸 살인기>,
진실에 대한 두 가지 태도
| 이두희
- 57 임정서가_
조선의 딸, 총을 들다
김남주 평전
두만강 아리랑
화산도(전 12권)
| 편집부
- 66 독립정신 이모저모



새봄이 옵니다!

김도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새봄이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봄은 새롭습니다. 새봄이라고 부릅니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난해와 다르지만, ‘새’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새싹이 돋고, 새움이 트고, 새순이 나오고, 새 가지와 새잎이 자랍니다. 눈부신 푸름과 고운 꽃, 탐스런 열매가 우리를 즐겁게, 싱그럽게, 맛깔나게 합니다.

봄의 향기가 코끝까지 와있는 설 명절에도 우리 동네엔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이 골목을 누빉니다. 아기의 울음, 젊음의 기쁨, 따사로운 가정, 이웃의 훈훈한 인정 대신에 한숨, 분노, 외로움, 강박함이 가득합니다. 아랫목의 따사로움은 윗목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는 최첨단 초거대병무기의 각축시위장이고 땅위엔 적대와 저주가 날카롭게 번득입니다. 가야할 겨울이 모질고 잔인하게 춥습니다. ‘북극 소용돌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운 역사 속 우리의 봄을 찾아봅니다. 3월엔 봄이 시작됩니다. 3.1운동이 있었습니다. 4월엔 봄꽃이 흐드러집니다. 4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5월, 6월 우리 산천엔 신록이 빛납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봄마다 선조선배들이 새로운 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민족자존과 자주, 연대와 단결, 용기와 창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진 겨울을 끝낼 새봄을 우리네 산 역사에서 배워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요?

겨레의 생존과 자주가 폭풍 앞에 선 호랑불입니다. 뜬금없이 “통일대박”을 띄우더니 북쪽에서 쏜 “광명성”과 터뜨린 “수소탄”으로, 산산조각으로 사라지고 전쟁 직전의 신냉전 먹구름뿐입니다.

통일대박에 동반할 상대와는 증오와 적대로 들끓고 있습니다. 신뢰의 과정을 만들지 않은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의 통일 겁박(劫迫)으로 받아들여져 위기조성에 일조한 셈입니다. 위기에 부닥친 정부의 애절한 읍소는 마침내 강고한 동맹국이라며 무기 팔려는 미국과 애증의 냉온탕을 반복해온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로 어계를 맞대고 박수치던 중국은 낯선 얼굴이 되어 냉전의 다른 축을 만들어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은 아마 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몇 조가 들지 모르는 방위비 분담으로 우리를 억누를 것입니다. 일본에게 구하는 협조는 군사대국화의 길을 우리가 앞서서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북핵으로부터 남을 지키려는 미·일·한 군사동맹은 북·중·러와 대결하는 신 냉전체제를 만들고 우리 남북이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언론들은 강대국만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자력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합니다. 한편에선 독자 핵무장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은 압박과 제재, 핵무장 등 강공책은 중국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니,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강경론도 새로운 협상의 주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이 미국의 ‘아시아로 돌아오기’ ‘새로운 세력균형’의 대중포위망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중국의 대미전략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는 ‘꽃놀이 패’ 바둑돌이라면, 우리의 불안, 고통, 경제적 난관과 피해, 멀어져가는 통일, 생각만 해도 전율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한심하고 통탄할 것은, 이 엄중한 한반도의 위기가 선거 전략으로 기획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야 모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북핵을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세계가 미국 대북외교의 실패를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무의지의 ‘전략적 인내’가 동아시아 전략을 위한 전략적 지연은 아닐까요. 한미합동훈련에 참수부대까지 동원된다는데 과연 아주 요절을 낼까요.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핵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는데, 미국의 대응은 제재와 협박 말고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자주적 역할을 찾을 순 없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학계와 언론에서는, 북핵의 단계적 동결, 한미군사훈련의 잠정적 중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전환 등 많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의 결연한 반대와 북미 평화협정과 비핵화대화의 병행추진을 말합니다. 우리정부와 국민의 자주적, 애국적 결단과 현실적이고 유연한 스마트한 정책전환과 이를 관철할 진지한 대미 대중 대일 대북은 노력에

자신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일본과 한반도는 천지창조가 다시 되지 않는 한, 숙명적 이웃입니다. 잘 지내야 좋지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후 환경 등 이웃끼리 협력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이제 동아시아에서 G2로 떠오른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에, 한 일이 협력하여 두 거국을 다룬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에 큰 기여를 하고, 한·일 모두 좋을 터인데, 최근 움직임은 그 반대의 길에 앞장선 모양입니다. 걱정처럼 신냉전의 한축, 그 앞잡이가 된다면, 평화는 물론 먹고사는 생존조차 위협받게 되지 않을까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련한 골칫거리 천덕구니가 될지 모릅니다.

작년 광복 70주년을 보내며 한·일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양국정부가 수년의 실랑이와 외면 끝에 위안부합의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합의란 것이야 말로, 저 단재선생의 분노처럼 “어진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용기 있는 이는 침 뱉을 일”입니다. 정부 당국자가 돈지갑을 흔들며 피 맺힌 할머니를 한 분씩 찾아가 달래본다니, 이게 전 세계 양식의 공분을 일으키고 여성인권운동의 거대한 이정표를 마련한 저 위대한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국민을 대신한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일본 극우정부는 그렇다 치고, 아무리 미국의 강권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정부의 사려가 여기에 그친다니, 참으로 자기가 자신을 능멸한 뒤에 남이 모욕한다(人必自侮然後人侮之)더니, 정말 그러합니다.

65년 한일협정은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의 규범이 아니라 장애임이 한국의 현재와 사법부 그리고 한일지식인들에 의해 선언된 불임불구의 파탄 난 조약입니다. 애초부터 한 조문도 양국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자국민을 속이기로 한, 이 한일협정은 조문의 개정이든 재해석이든 그간 양국에서 축적한 일제의 강제합방과정과 식민지배에 대한 연구와 정의로운 역사관을 바탕한 새로운 한일협정을 위한 재협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한일양국이 진정 가치동맹을 말하려면, 최소한 ‘침략이 무엇인가’에는 일치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총리는 일본의 과거 한국침략에 관련하여 “침략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자국국회에서 말했고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권과 더불어 자국 이익에 동원되는 것 말고 가치동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3·1운동 100주년에는 선열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한일협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한일관계는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열풍이 선거판을 뒤집을 듯 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합니다. 정말 죽을 지경인 청년·노인·중소기업인

천지입니다. 학계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에서 가계의 몫이 기업으로, 그것도 초대기업으로 심한 불균형을 보이며 옮겨갔음을 말합니다. 초대기업을 뺀 기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자신의 노임을 벌 뿐인 자영업자 등의 분노는 정치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배불균형은 국가·자본동맹이 주도했음에도 이를 대체할 국가·사회정의 동맹은 구체적 정책으로 주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제전복이 아닌 이익 균점(均霑)이 우리 제헌헌법18조에 규정되어 이승만 초대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바 있었습니다만, 5·16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분명, 국가는 소득분배에 개입해야 합니다.

최근의 정치, 정당개편 양상은 이러한 분노와 요구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소득분배에 국가정책을 개입하기 위한 정치세력화입니까? 아니면 이합집산 공천싸움입니까? 우리 헌정제도에서 정당은 국고지원 등 여러 가지 법이 정한 특혜를 받는 헌법질서의 핵심 부분인데, 이당의 책사가 저당의 대표가 되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 과연 정당이 국민의 정치의사표현의 핵심적 매개체인지 의문입니다.

이제, 분노, 불만, 신음, 요구, 갈망이 직접 정책과 입법 요구로 표현 주장되어야 합니다. 정당대의제가 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면, 직접민주주의가 더 다양하게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보여주듯, 정당 세력 투쟁의 교착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입법사안별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도가 실현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정보화 수준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SNS가 직접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제도화 되는 것이 옳습니다.

봄입니다. 새봄, 새 농사에 펼쳐나서야할 때입니다. 자주 분노 연대 평화 열정을 분명히 할 정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 시인(신동문)은 4월 혁명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혼자서만/ 야망 태우는/ 목동이 아니었다/ 열씩 백씩/ 천씩 만씩/ 어깨 맞잡고/ 팔짱 맞끼고/ 공동의 희망을/ 태양처럼 불태우는/ 아--- 새로운 신화 같은 젊은 다비데군들(신동문, 오 다비데군(群)처럼)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 이글은 3.1절 97주년 선언과 동시에 준비되어 표현과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필자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를 넘어 다시 해방으로!



윤 미 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제국주의 일본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참혹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들은 이제 머지않아 한 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고통을 꺼안은 채 모두 삶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가해자인 일본정부는 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각료와 공인들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거듭됐다.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내각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의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꾸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도 감행했다.

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 피해자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

그런데 최근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 외교장관회담이 열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결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es) 원칙과 국제사회의 권고가 무시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며, 일본정부는 마땅히 피해자들에게 범죄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처벌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망언에 대한 반박과 재발방지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일 합의에는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합의에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전혀 수용할 수 없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피해자 중심(victim-centered)’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권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둘째, 모호한 인정과 사과가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노예제였다는 사실도,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주체’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일본정부에 제시했지만 일본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즉, 무엇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정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합의였던 것이다. 모호한 인정위에 이루어진 대독사과 표명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아베 총리는 1월 18일 일본 참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비방 중상이라며, 일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언하였다. 한일합의에서 이루어진 정부책임 인정과 사과가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셋째, 법적 책임이 결여된, 배상이 아닌 ‘돈’ 10억 엔 재단출연금은 제2의 아시아여성국민기금 방식이었다. 이것은 이미 1995년에 피해자들이 반대했던 것이었다.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재단출연금에 대해 “배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은 것이다.

넷째, 후속조치는 없고 향후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함으로써, 그 후속 조치의 의무를 피해국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다섯째, 가해자가 내건 부당한 조건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조건이 되어버렸다. 피해자를 형상화한 평화비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그 역사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더불어 이번 합의에서는 양국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비판과 비난을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가해국과 피해국 쌍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양국정부가 이 부당한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결국 이번 합의가 일본정부의 조건부 사과이자 양국 간 정치적 담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 12.28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을 저버린 정치적 담합일 뿐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YMCA, YWCA 등을 비롯한 400여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500여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이번 합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행동”을 결성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후속 조치를 시민의 손으로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모아 “일본군 ‘위안부’ 와 손잡는 [정의기억재단]” 설립 모금을 시작했다. 벌써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스스로가 먼저 재단 설립 출연자가 되어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수많은 동료 피해자들과 손을 잡겠다고 뜻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라는 중대한 전시여성인권침해를 역사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였다. 25년 동안 정대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으로, 유럽으로, 미주지역으로, 유엔으로 각국 의회와 정부로 직접 찾아다녔다. 피해자들은 말로 하기조차 힘든 고통스러운 피해를 증언하며 정의 회복을 요구해 왔다. 1992년부터 연대를 시작한 아시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은 2014년에 도쿄에서 제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국가 주도의 범죄였다는 사실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사업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제언을 채택하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연합국이었던 미국정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제언은 이번 12.28,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시민사회단체의 전국행동을 넘어서서 아시아와 세계연대 행동도 진행되고 있다.

3.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잡기 캠페인

1992년 1월 8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어느새 24년이 흘렀다. 그러나 수요일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시민들의 연대가 늘어났다. 포기되지 않았던 그 수요일은 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수요일이 되기도 했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손잡은 날이기도 했다.

그 24년의 시간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국내외 시민들과 할머니들의 연대는 우리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로 가게 하는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 할머니들과 손 잡았던 수많은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은 전시 성폭력 피해의 재발을 막고, 인권회복을 위한 네트워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노력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에서 전혀 무시되었고, 일본 아베총리는 합의 이후 일본국회에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24년간 포기되지 않았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할머니들의 손을 잡을 때이다.

어느 수요일,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단체로 수요시위에 참석을 했던 날이었다. 노동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뒤늦게 수요시위에 찾아온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연대의 의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날 무렵 김복동 할머니가 “내가 한마디 하겠소” 하시며 나오셔서 “귀구명에도 별들 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쟁하고 해 뜰 날 있어요. 노동자들 힘냅시다. 이 할매 나비도 힘내서 날고 있으니 노동자들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시며 격려했다. 이번 12.28일 굴욕적인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 아닌 10억 엔 나는 거부합니다. 그런 돈이라면 1천 억을 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며 “나도 피해자이지만 직접 재단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함께 고통 받던 일행들 20명 피해자와 손잡겠습니다.” 하시고 20명과 손잡는 성금 100만원을 전달해 주셨다.

2016년 1월 현재, 한국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192명이 사망하여 46명만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평균나이는 90세에 이른다.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아픔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다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면 좋겠다. 우리의 손잡음으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호소합니다.***

할머니와 손잡는 [정의기억재단] 100만 출연자가 되어주십시오
국민은행 069101-04-204213 김동희(정의기억재단)

외교부는 ‘12·28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박 용 규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연구교수

몇 년 전에 필자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시내 여러 곳에 유대인 학살을 알도록 하는 기념관과 박물관이 있음을 보고, 독일의 과거 청산이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대인에 행한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에 막대한 금액으로 배상하였습니다. 독일 정부의 지도자들은 빌리 브란트 수상 이래 현재의 메르켈 총리도 끊임없이 자신의 조상들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 범죄에 대해 사죄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과거 한국 지배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이 되는 작년 말에, 대한민국 국민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외교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안부 합의문을 작년 말에 기습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느닷없이 발언하

였습니다. 위안부 협상 전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10억엔 정도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정부는 한국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필자는 한국근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국 외교장관이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첫째, 합의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상 전문 발표만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의문 한 장에 쓰인 글귀만으로 과거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이 마무리되지 않는 게 역사의 상식입니다.

합의문에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한화 100억원)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0억원에 해당하는데, 겨우 집 10채 값 지불로 일본군에 의해 짓밟힌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국 당사자들과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 세워진 소녀상의 이전까지 합의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소녀상이 위안부 문제 합의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재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일본에 단 한 개의 한국 지배를 반성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제나라 땅에 소녀상을 만들었습니다. 임기 5년에 불과한 정권이 국민이 만든 소녀상을 처리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의식이 있는 정부라면 정부가 앞장서 소녀상을 전국에 많이 건립하여, 다시는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합의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실천을 통해서만 담보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합의는 파기해야 합니다. 합의문에는 “아베 총리대신은 다시 한번 위안부 여성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합의문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베 총리는 2016년 1월 12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의 말을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달 14일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관료들은 사죄의 말을 하는 것을 거절하고, 게다가 인간이라면 도저히 발언할

수 없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성하지 않으려고도 하는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의 외교부가 역사의 진실을 말살하는데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관료가 의회에서 직접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위안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배상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한 뒤, 일본 기자들에게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합의문에는 진상 규명과 위안부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위안부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도 못하였고, 그분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이 합의를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다행히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합의문에 서명도 하지 않고 비준서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하니, 외교부는 다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원 단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본과 협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누구나가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이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외교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를 보고서, 내가 아직도 식민지 시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해지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도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10억엔(한화 100억원) 국민기금을 모금하고자 설립한 ‘정의기억재단’에 1백만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잃은 시기에 우리의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군에 의해 총체적으로 인생이 파괴되었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이분들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당당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다시 나서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위 글은 필자의 동의 하, 2016년 1월 20일자 <브레이크뉴스>에 실린 기사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이성의 마비는 파국을 부른다 : 한반도 핵 군비 경쟁과 핵 선제공격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한반도는 목하 위기로 치닫고 있다. 1950년부터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운위하던 미국은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실전에서 사용가능한 신형 핵무기를 개발·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한미연합사령부는 북의 수뇌부와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려는 작전계획 5015를 도입하여 현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공개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무슨 조짐만 있어도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서울과 한국을 ‘해방’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그만큼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을 지적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위기에 만성이 된 것인가. 이성이 마비된 것인가.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이성이 마비되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황은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어리석고도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명백하게 실패했다. 북의 김정은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공고화되고 경제도 되살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까지 거침이 없다. 남북 간 교류의 마지막 끈이었던 개성공단도 문을 닫았다. 남과 북 사이에는 긴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통로마저 끊겼다.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전쟁 이후 역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는 죽었다. 그 주검 위에 한반도·동북아시아 신 냉전의 찬 바람이 스산하다.

사람이 사는 데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없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구별 짓는 것은 실패의 유무가 아니다. 실패의 경험에서 배워 이를 되풀이 하지 않는데 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서 미래를 사는 지혜를 깨우친다”고 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패한 것은 교류와 대화 때문이 아니다. 개성공단 때문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교류가 없고 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재로 북을 고립시키고 군사력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대화를 끊고 북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북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로켓을 개량했다. ‘전략적 인내’는 북이 전략적 능력을 추구할 명분과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략적 인내는 결국 북의 이러한 전략적 행위를 인내한 것이었다. 더구나 제재가 추가되는 순간마다 북은 핵 시험이나 로켓발사로 대응했다. ‘신뢰 프로세스’가 실패한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신뢰를 만드는 대신 이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은 실패에서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다. ‘전략적 인내’의 실패, ‘신뢰 프로세스’의 실패 책임을 엉뚱하게 개성공단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경제지원과 교류를 탓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군사적 압박을 늘리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중국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북의 ‘수소폭탄’ 시험에 이어진 ‘광명성 4호’ 발사에 위험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명성 4호가 캘리포니아주 슈퍼볼 경기장 상공을 지나갔다는 사실은 북의 미사일 탄두가 그 궤도를 따라 미국 상공에 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최근 상원에 제출한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도 북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인 KN08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미 취했다”고 평

가하고 있다. 미국은 검증되지 않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라도 한국에 전진배치하고,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인 5015를 작동해서라도 북의 핵미사일을 막아 보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대응'은 기실 오바마 정부의 강경대응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북 선제 타격 훈련에 앞장서고, 미·중 갈등의 최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싸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 싸움판의 한 가운데에 들이밀고 있다.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반도는 미·중 싸움의 전장이 될 것”이라는 중국의 경고는 섬뜩하다.

이들은 실패에서 배우지도 못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한반도 핵 군비 경쟁 시작했다

새는 하나의 날개로 하늘을 날지 못한다. 사람은 하나의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 2016년 초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북이 갑작스럽게 수소탄 시험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으니,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일찍이 리온 시걸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죄와 벌’이 그 주제이다. 죄를 저지른 자는 명확하고, 벌을 주는 자도 캐스트가 확실하다. 과거에도 같은 줄거리로 세 번이나 공연을 올린 적이 있는 터라 관객들은 차후 전개과정도 대충 알겠다는 표정들이다. 소품이나 달라진 정도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평화의 수호자로서만 등장한다.

공정한가?

미국은 현재 수소탄을 포함해서 7천기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대통령정책명령 24호로 핵무기 개량을 지시했다. 앞으로 10년간 3천5백만 달러,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량형’ 또는 ‘수정형’ 새로운 핵무기들이 생산되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 및 공군은 글로벌번개, 글로벌천둥 등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핵전쟁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하기도 한다. 전략자산을 동맹국에 파견하는 등 일부 동맹국도 훈련에 동원한다. 한반도 등 국지전쟁훈련도 매년 실시한다.

오바마 정부는 전임 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폐기했지만 북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은 배

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현 핵 군사 독트린은 북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히 요한 갈통이 얘기하는 구조적 폭력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지 않은가.

미국은 이 폭력의 구조 속에서 가만히 두 손 놓고 앉아만 있지 않았다. ‘전략적 인내’ 아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한 눈을 감고 하는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 북이 제안한 평화회담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성 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월 의회에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어떠한 여건도 상상하기 어렵다”며 외교관의 발언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표현을 구사했다. 12월 3일에는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회동에서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제고”하기로 했다.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주도했다. 결국 12월 8일에는 북의 전략군 등에 독자적 제재를 가했다.

이중 특히 제재는 북의 핵 시험을 불러올 것이 뻔했다. 북은 2006년에도, 2009년에도, 2013년에도 대북 제재에 핵 시험으로 대응하지 않았던가.

역시였다. 북은 1월 6일 ‘수소탄 시험’으로 대응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북한 핵무기가 위험하다면 미국의 핵무기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핵무기가 평화를 위협한다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북의 논리도 자가당착이다. 미국과 북은 외눈으로 서로를 보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바야흐로 한반도에서는 전략핵군비경쟁이 시작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을 염두에 두고 정밀유도핵폭탄같은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치우고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인내적 절제적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북은 핵무기의 다종화 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화와 규격화를 운위하고 있다. 양산체제로 들어갔다는 위협이다.

나는 2016년 ‘북한무대’에서 집단적 편시를 읽는다. 세상을 두 눈으로 보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핵 군비경쟁은 더 위험하게 벌어질 것이다.

선제공격이라는 위험한 신화

전쟁을 일으키는 신화는 위험하다.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신화는 말할 수 없이 위험하다. 1900년대 초 유럽에는 하나의 신화가 횡행하고 있었다. 먼저 공격하는 자가 승리하고, 방어에 급급하는 자는 필패라는 믿음이 유럽 지도자들을 휘감았다. 무기체계가 발달했고, 군사력을 순식간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군사 기동을 은폐·위장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위기 시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독일군의 쉴리펜 계획은 이러한 신화를 아주 잘 반영한 작전계획이었다. 프랑스와 러시아제국이라는 양대 강국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선 프랑스를 전격적으로 공격하여 제압한 후 군사력을 동부전선에 집결하여 러시아를 패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으로 독일이 선제공격을 당하면 그쪽을 방어하다가 반대편에서 공격을 당해 패전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선제공격만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인식은 프랑스와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도 유사시 군대를 최단 시간에 동원하여 상대방을 먼저 공격한다는 군사작전을 수립했다. 군비경쟁도 불이 붙었다. 1908년부터 5년간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50% 증액했다.

모든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쳐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만들어 놓은 팽팽한 긴장상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를 맞아 폭발해버렸다.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왕위 후계자 페르디난드 공을 암살한 총알이 모든 유럽국의 작전계획에 불을 당겼기 때문이다. 각 국은 기존 계획대로 군사력을 동원했고,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국제적 동맹이 강대국들을 모두 전쟁으로 끌어들었다. 일단 불은 붙은 아무도 끌 수 없었다. 순식간에 전 유럽을 전쟁 불구덩이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다. 천만 명이 사망하고, 2천만 명이 부상당한,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그 결과였다.

잭 스나이더 등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당시 유럽을 휘감은 이 믿음에 ‘공격의 신화’라는 명칭을 붙였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신화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화가 인류를 세계대전의 참화로 밀어 넣은 주범이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2016년 봄 한반도 상공에는 또 하나의 신화가 횡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과 북이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공격의 신화’다. 한·미 양국은 북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북이 이를 사용하기 전에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며 선제공격을 공식적으로 작전계획에

도입했다. 그 계획을 시행할 능력을 지금 시험하는 중이다. 북도 맞기 전에 먼저 쳐야 산다며 선제공격을 운운하고 있다. 소형화된 핵탄두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능력도 과시하고 있다.

2013년 봄 한반도는 한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미국과 북이 상호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며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3년 후인 올해 봄, 한반도 위기는 그 수준이 다르다. 양자가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그 힘을 과시하고 있기에 오늘 한반도에 횡행하는 ‘공격의 신화’는 유례없이 위험하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이러한 신화를 되뇌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이 신화는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를 핵전쟁으로 밀어 넣을 위험을 안고 있다.

‘신화’는 신화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세계대전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핵 불구덩이로 가는 노정은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대신 비핵화와 평화라는, 선례가 없는 길을 열어라. 그 첫걸음은 이성을 되찾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박 찬 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단재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의 서두에서 “강도 일본이 우리 (중략) 경제의 생명인 산림·천택·철도·광산·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 끊고, 토지세·가옥세·인구세·가축세·백일세·지방세·주초세·비료세·종자세·영업세·청결세·소득세 기타 각종 잡세가 축일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여간 상업가들은 일본의 제조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어 차차 자본집중의 원칙 하에서는 멸망할 뿐이오, 대다수 인민 곧 일반 농민들은 피땀을 흘리어 토지를 갈아 그 종년 소득으로 일신과 처자의 호구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즉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지배, 특히 경제적 지배를 ‘경제적 약탈’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도 대체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오늘날 이는 ‘식민지 수탈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식민지수탈론’의 입장은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토지를 약탈하고, 미곡과 면화, 기타 여러 산업자원을 수탈하였으며, 중일전쟁 이후에는 인력까지도 수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수탈론은 초기에는 일본제국주의가 강제력을 통해 토지와 미곡 등을 폭력적으로 수탈하였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탈론은 ‘원시적 수탈론’이라고 훗날 불리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유출되거나 수탈된 자금이나 물자가 유입자금의 몇 배가 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징병·징용·정신대 등 인력수탈을 포함하면 상상을 넘는 수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식민지 수탈론’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내재적 발전론과 연결되어 조선후기 이래 발아, 성장해온 자본주의적 관계는 만약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이 없었다면 더욱 더 성장, 발전했을 것이나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수탈론’은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식민지 수탈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면서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갔다는 주장이며, 1960년대 이후 ‘식민지 수탈론’은 사실상 한국사학계의 통설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경제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식민지 수탈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론은 흔히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식민지화되기 이전에는 자생적 근대화에 실패했으며, 식민지화 된 이후에 비로소 외세의 의해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에서의 근대화는 식민지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 이후 공업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은 3%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상당한 수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적인 발전, 특히 공업화는 해방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은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그들은 우선 한국학계의 통설이 되어온, 조선 후기 사회의 내재적 발전, 특히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들은 한국 사회는 서구 근대의 수용과 이식을 통해 비로소 근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그동안 한국사학계에서 통설이 되어온 자본주의의 맹아론을 허구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맹아론과 같은 내재적 발전론은 1960년대 이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학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들은 한국에서의 근대화의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식민지화 이후라고 본다. 그

들은 식민지 개발자로서의 일본제국주의를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철도·항만·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였고, 행정·재정·교육·위생 등 여러 부문에서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업·어업·광업·공업·상업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제도와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화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소유권 제도의 근대화,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농업생산력의 제고, 1930년대 광업과 공업의 본격적인 발전에 의한 조선의 경제개발을 높이 평가한다.

셋째, 이들은 식민지 전 시기를 통해 조선에서의 경제성장률은 이례적으로 높은 3%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수확은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들에게도 돌아갔다고 본다. 예를 들어 조선인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영양 상태가 좋아졌으며, 그 결과 신장도 늘어났다고 본다. 특히 인구의 높은 성장세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넷째, 위와 같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근대화, 자본주의화의 영향을 받아 조선인도 자기 성장을 도모했다고 본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 개발로 인한 인프라와 한인들의 맨 파워의 성장으로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위와 같은 논리 위에서 한국근대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내재적 자립적 근대화’와 ‘외래적 식민지화’의 대항이라는 기존의 한국근대사 인식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60년대 이후 한국사학계의 내재적 발전론이 제기한 이와 같은 기존의 인식틀은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사실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17세기 이후 19세기까지 경제가 줄곧 발전해 왔을 것이라는 기존 학계의 통념을 부정한다. 그들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는 발전과 안정을 보이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조선 경제는 침체와 위기에 빠졌다고 본다.

또 이들은 기존 한국 학계의 식민지 시기 일제의 수탈론을 비판하고, 대신 이른바 ‘경제성장’론을 주장한다. 이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경제에 대한 수탈은 사실상 없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토지조사사업 당시 총독부 권력의 토지 수탈은 없었으며,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쌀의 수탈도 없었다고 본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토지 수탈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근대법적 확인과 조세 수취의 증가에 있었다고 본다.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일본으로 쌀이 대량으로 수집되어 실려 간 것도 유통과정을 통한 것이었지, 수탈을 통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들은 수탈론 대신 식민지시기 경제성장론을 내세운다. 이들은 1911~1940년의 경제성장

률은 연평균 3.7%였으며,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일본, 대만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공업성장률은 9%(광공업은 9.4%)였고, 1910, 20, 30년대는 각각 10.5%, 4.8%, 12.5%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30년대에 공업성장이 가속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수탈’의 역사가 아닌 ‘개발’의 역사로 볼 것을 주장한다. 즉 경제지표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일제하의 ‘식민지 개발’에 주목하고 동시에 여기에 대응한 한국인의 자기개발과정을 중시하면서 일제하에서 이루어진 압축적인 생산력 발전과 자본가와 임노동계급의 형성이 해방 후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를 가능케 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미 식민지시기부터 일본 제국주의 지배자들과 일본인 관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오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경성제국대학 교수 다보하시(田保橋潔)는 1944년에 쓴 『조선통치사논고』(1944)에서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는 치안유지, 산업개발, 생활안정 등에서 현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조선인들도 천황의 황은에 감사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서 미곡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든 것이나, 전쟁 중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는 일본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한국 통치 기간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경제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그런 점에서 일본의 한국 지배정책을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이라고 간단히 말해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입장에서 대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스즈키 타케오(鈴木武雄)는 1928년부터 경성제국대학에서 법문학부 교수로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조선총독부의 경제정책에도 깊숙이 간여한 인물이다. 그는 종전 이후 일본에 돌아가 1946년 일본 대장성에서 비밀리에 수행한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라는 프로젝트의 조선, 만주, 대만편 가운데 조선편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스즈키 다케오는 이 프로젝트에서 『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이라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일본의 식민지 한국 지배정책을 미화하고, 일본의 지배에 의해 한국은 비로소 근대화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비록 일본의 한국 통치에 문제가 많았지만,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통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의 통치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은폐, 왜곡, 호도하는 내용이었다. 일제의 한국 지배정책은 한국에서 인

적·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한국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근대화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 학계의 일부 학자에 계승되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일본사 전공자인 마크 피티는 이른바 ‘개발과 수탈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식민지 주민은 일본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함과 동시에 착취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식민지시기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인해 농민의 구매력이 향상되었고, 일본이 여러 근대적 시설을 건설하고 제도를 도입(예를 들어 근대적 통신망, 금융기관, 교육위생시설 등)함으로써 조선인도 이익을 향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학계에서는 마쓰모토 순로(松本俊郎)가 만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침략과 개발’이라는 틀로 그려내어 이후 식민지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전전(戰前)의 일본 역사의 침략적 성격, 일본사회의 불평등성 등에 대해 비판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에서 추진되었던 여러 의미를 갖는 근대화는 식민지 지배자들의 뜻과는 달리 식민지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도리어 그 나라의 근대화를 촉진한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의 연구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식민지에서의 ‘개발’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이후 이같은 시각을 받아들여 한국사에 적용한 것은 나카무라 테츠(中村哲)였다. 그는 “한국에서의 종속자본주의의 고도한 발달이라는 현상에 서서 그 발전과정 속에 식민지시기를 위치 설정한다는 시각”에 서서, 근대 한국의 사회구성을 “반식민지·국가적 농노제사회(1876~1910년) → 식민지·과도적 사회(1910~1935년) → 식민지·자본주의사회(1935~1945년) → 종속자본주의사회(1945년 이후)”로 시기 구분하였다. 그는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를 ‘식민지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근대적 지주소유, 공업화정책, 노동자 형성 등의 변화가 해방 후의 종속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학계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한 것은 호리 가즈오(堀和生)이다. 그는 1930년대 조선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막대한 농업인구가 조선 외부나 조선 내의 특정지역, 산업부문에 단기간에 급속히 이동하는 사회적 구조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중소공장의 일정한 발생·발전과 동시에 대규모 공장화의 경향이 진전되었다는 것, 경성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을 묶어 광범위한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분업이 성립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시기 조선경제는 나름의 독자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소수 대도시로의 도시기능의 극단적 집중, 영세공업의 박약성과 대공장의 우위성의 대칭, 자본·기술

면에서의 강한 대일의존,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산업·지역에서의 조선인의 급격한 증대 등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와 같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특성이 해방 후의 한국사회의 전제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미국, 일본 학계의 식민지 자본주의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학계, 특히 경제사학계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앞서 본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학계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역사학계는 물론 경제사학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특히 경제사학자 허수열은 『개발없는 개발』(2006)이라는 책을 통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이 이론이 “조선경제의 발전 = 조선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잘못된 등식에서 출발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는 식민지시기 조선농민의 소득변화를 보면, 농업투자로 인한 생산성 증가보다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증가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농업 ‘개발’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통해 보면 농업생산에서 조선인 몫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광공업의 ‘개발’과 더불어 조선인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임금 수취로 인한 조선인 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고 보았다. 또 조선인 기업은 전시체제기를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 영세규모였고, 소수의 경쟁적 분야에 몰려 있었으며, 조선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수적 증가로 인한 소득창출도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개발’을 통한 조선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 측은 1910~1945년 사이에 조선에 80억 엔을 투하하여 1945년의 시점에는 787억 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조선 투자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올렸고, 그것을 통해 조선경제의 명맥을 장악해갔다고 보았다. 즉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 노동, 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일본인들이 토지와 자본에 대한 지배력을 급격히 높여간 과정이었고, 조선인은 주로 노동 공급의 확대를 통해 ‘개발’에 참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개발’이 진행될수록 조선인 경제부분의 전망은 오히려 암울해져 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허수열의 주요 논지는 식민지시기 경제개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해방 시점에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 자산은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와해과정 및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급격히 줄었고, 그 액수도 1950년대 말까지의 미국의 한국원조 액수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아 1960년대 이후의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덧붙여 일제하 한국사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목은 항일민족해방운동이나 일제의 수탈사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이러한 민족의 저력이 이민족 지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철되어 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제시기의 변화는 모두 일제지배의 소산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일제시기에도 조선인의 저력은 산업, 교육, 사상,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수열의 책이 나온 이후 식민지근대화론 쪽에서 바로 반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수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허수열 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허수열은 다시 이들에 대한 반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인당 소득의 증가, 생활수준의 개선론 등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1911년부터 194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7%였으며, 인구증가율은 1.3%여서, 1인당 소득증가율은 2.4%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지 않은 가운데 식민지 조선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계산한 것이고, 또 조선인들 가운데에서도 빈부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채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의 소득 격차, 그리고 조선인 내부의 소득 격차는 대단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따라서 평균치를 내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었다.

또 그들은 식민지시기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악화되어 갔다는 허수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들은 191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1인당 소득과 소비지출은 각각 연 2.3%, 연 1.9%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비록 곡물의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육류, 소채과실, 어패류, 장류, 가공식품 등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총 칼로리의 소비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영양상태의 결과물이라 할 신장도 1920년대 말까지는 커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식민지시기에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향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근대적인 소비문화가 조선사회 전반에 보급되면서 소비욕구는 급증했지만 소득과 소비는 그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궁핍도는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객관적으로는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었지만, 상대적 빈곤감은 갈수록 심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 가운데 육류, 소채과실, 가공식품 등의 소비 주체가 주로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와 같이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주장은 1930년대 후반 이후 농촌의 춘궁농가 호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던 사실과 크게 상반된다. 당시 신문을 보면 절량농가, 춘궁농가에 관한 기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1940년의 경우, 춘궁농가는 전체 농가의 48.3%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과연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편 필자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이른바 ‘식민지 이중사회론’의 틀로써 비판해왔다. 그 요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민지 조선에는 수십 만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히 컸고, 갈수록 그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 또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거주공간은 대체로 분리되어 있었고, 일상생활과 문화생활 등도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또 조선에서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중점도 주로 일본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 그것은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일본 본토에 못지않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더 나아가 본토에서 더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이주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총독부가 기대한 만큼 다수의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주해오지는 않았지만, 매년 약 2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들은 조선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을 점차 특권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동화주의,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였지만, 이는 조선인들을 문화적으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분리와 차별 정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사회는 점차 민족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인들의 상층사회와 조선인들의 하층사회로 나뉘어가고 있었다. ‘식민지 이중사회’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상층사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상층사회를 구성한 일본인들은 주로 관료층과 지주 및 자본가들이었다. 반면에 일본인 소상인, 노동자, 농민들은 조선인들과 마찬가지로 하층사회에 속해 있었다. 또 소수의 조선인 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총독부 관료들은 상층사회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 노동자, 소상인 등 조선인들은 하층 사회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하층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또 교육과 의료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같은 하층사회 내부에서도 민족을 기준으로 한 계층 구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조선사회는 ‘중층적 이중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4·19 혁명정부에 참여한 친일인사들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 소장

4월 19일, 56주년 4월 혁명 기념일이 다가온다.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3·15 부정 선거의 오점을 남긴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장면 내각은 다수의 친일인사를 등용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장면 국무총리는 1925년 미국 맨해튼 가톨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1931년부터 서울 동성상업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1940년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연맹 간사를 맡았고 1941년 8월 7일 종교계의 총동원을 논의하는 시국간담회에 노기남 대주교와 함께 천주교 대표로 참석했다. 1943년 6월 16일에는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항공기 구입비 130원을 동대문 경찰서에 현금했다. 1944년 9월에도 그는 국민동원총진회 중앙위원을 맡았다. 광복 후 초대 주미대사, 2대 국무총리, 4대 부통령, 7대 국무총리(내각제)를 지냈다.

그는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수록한 친일인명사전에 가톨릭 분야 친일파로 등재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친일파로 분류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한 장진(2011년 사망) 교수, 천주교 춘천교구장을 지낸 장익 주교 등 2남을 두었다.

현석호 장관은 1933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해 조선총독부 경부(警部)로 관직을 시작했다. 이후 전남도 화순군수(1936년), 황해도 산업과장(1938년), 북경 동아원 사무관(베이징 총영사관 영사·1939년)으로 근무했다. 충남도 광업부장(1944년) 재임 중 8·15를 맞았으며 미군정 충남지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 수립 뒤에는 남선전기 부사장(1949년)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고향인 예천군에서 1954년 3대 총선 때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사사오입개헌'에 반발해 탈당했으며 민주당에 입당, 중앙당 조직부장(지금의 조직본부장)에 선임되는 등 신파의 핵심 인물로 등장했다. 1960년 총선에서 재선되어 장면 내각의 국방부 → 내무부 → 국방부장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1967년부터 가톨릭 교리연구로 여생을 보냈다. 그는 1986년 <한 삶의 고백>이라는 회고록을 펴냈다. "나는 일제에 협력한, 고급관리로 일한 친일파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충남지사에게 전했던 사직 사유와 "수많은 순국선열의 공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은 참으로 죄스럽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며 등 자신의 친일 죄과를 참회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대표적인 친일 전력 반성 사례라고 인용했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의 조선총독부 사무관 분야에 선정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관료 부문에 포함되었다. 1988년 사망 당시 1남 3녀를 남겼다.

조재천 장관은 일본 주오대학 유학 중 1940년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시행한 조선변호사시험과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연달아 합격했다. 1941년부터 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 사법관시보를 거쳐 1943년 평양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1945년 6월 평양지방법원 검사국 검사로 옮겨가 광복 때까지 근무했다. 정부 수립 후 내무부 치안국 경무과장과 경상북도 경찰국장을 거쳐 만 38세의 나이인 1950년 1월 경북지사직에 올랐다.

1954년 3대 총선 당시 경북 달성에서 민주국민당 공천으로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때는 민주당 선전부장(현재의 대변인)을 맡아 맹활약했다. 1958년과 1960년 대구에서 4~5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됐으며 장면 내각의 법무부와 내무부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1963년 총선에서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4선을 기록, 야당통합에 앞장섰다. 4남 5녀를 두고 1970년 사망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분야에 포함된 그의 창씨개명은 昌山幸右이다.

김영선 장관은 일본식 이름이 金山永善이다. 1942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으며 1944년 말 전남 진도군수로 부임해 광복을 맞았다. 1948년 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을 거

처 1950년 2대 총선에서 고향인 보령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국회에 등원했고 3대 때는 자유당으로 재선했다.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해 탈당, 민주당 창당 주역이 되었으며 경제통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60년 총선에서 3선 의원이 되었고 장면 내각의 재무부장관으로 활동하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한때 투옥되기도 했으나 박정희 정부에 발탁돼 국토통일원장관(3년)과 주일대사(5년) 등을 역임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분야에 수록되었다.

이태용 장관의 창씨개명은 松澤泰鎔이다. 1934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했다. 1935년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근무하다가 만 27세의 나이인 1937년부터 강원도 양구군수와 평강군수 등을 지냈다. 1943년 승진해 총독부 농림국 사무관에 임명된다. 양구군구 재직 중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수품 공출, 마필 징발, 국방헌금 등 전쟁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이때의 공으로 1944년 일본 적십자사가 수여한 유공장(有功章)을 받았다.

광복 후 전문 관료의 경력을 인정받아 1948년 이사관에 임명돼 상공부 수산국장, 체신부 경리국장 등을 역임했다. 1954년 3대 총선 때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3대 정·부통령 선거 당시인 1956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1958년과 1960년 실시된 4대~5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제천에서 연거푸 당선됐다.

4·19혁명 이후 장면 내각에서 3주 동안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냈고, 1961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5·16 군사쿠데타를 맞았다. 1963년 6대 총선에서는 전국구로 등록했다가 뒤늦게 승계하며 4선을 기록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관료 부문에 선정되었다. 1968년 사망한 그는 슬하에 5남 4녀를 남겼다.

김선태 장관은 1938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후, 전주·청주·청진 등지에서 조선총독부 판사를 역임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변호사 개업을 하고 국민대 강사로 있다가 1954년 3대 총선 때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 정계에 진출했다.

1955년에 민주당이 창당되자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1958년 재선의원이 되었다. 1960년 3선에 성공한 후 장면 내각의 초대 무임소장관 자리에 3주 동안 있었다. 유창한 언변으로 자유당정권의 비리에 대한 강경발언을 많이 한 까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오랫동안 정치규제에 묶여 있었다. 1970년 신민당 정무위원 겸 인권옹호위원장을 맡아 정계에 복귀했으나 원내 재진입은 실패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오위영 장관은 1928년 일본 고베고등상업학교(현 고베대학)를 졸업하고 귀국했다. 경남

언양금융조합 대리이사를 거쳐 1929년 합천 초계금융조합 이사, 1932년 진해금융조합 이사로 근무했다. 1935년 조선신탁회사(한일은행 전신) 군산지점 지배인 대리인 입사해 1941년 대구지점 수석지배인 대리(부지배인)로 승진했다. 1945년 미군정이 시작되자 경력을 인정받아 본점 영업부장 겸 상임이사에 임명되었고, 조선신탁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2년6개월 간 은행장을 지냈다. 그는 신탁은행에 있으면서 기반을 닦아 부산 일원의 자산가로 급부상했고, 미국시찰단으로 참여해 장면 주미대사를 처음 만나 그와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2대 총선 때 고향인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자유당에 입당해 초선이면서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당 중앙상임위원장, 국회 전원위·재경위·예결위원장을 두루 거쳤다.

1954년 자유당을 떠나 호헌동지회에 참여했고 이듬해 민주당 창당에 가담했다. 1958년 민주당 의원으로 재선되며 자유당 탈당파인 장면과 더욱 밀착되어 원내총무로 선출되는 등 신탁파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1960년 5대 총선 때는 경상남도에서 참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장면 내각의 초대 국무원 사무처장(당·정 사이 정책조정 담당)을 맡았다. 1961년 1월 개각 당시 무임소장관에 임명됐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각했다. 딸 오덕주를 김용주 전방 회장의 장남인 김창성(김무성 대표의 큰형)에게 시집보냈다.

금융조합이 총독부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말단기관 역할을 담당했으며, 조선신탁회사의 설립목적이 일본 독점자본의 축적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위영의 친일행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철 장관은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 출신이다. 동아·조선일보 기사를 거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기자와 영업국장(1938년) 등으로 활동했다. 1950년 2대 총선 당시 고향인 충남 청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 5대 총선 때는 민주당, 1963년 6대에는 국민의 당으로 3선에 성공했다. 장면 내각에서 체신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간사장(원내총무)에도 선출되었다. 1965년에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취임했다. 동아일보 1937년 8월 31일자 국방헌금 기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 등 친일 부역자이다.

주요한 장관은 창씨개명이 마쓰무라 고이이다. 그는 <불놀이>로 유명한 시인 겸 언론인 출신이다. 한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의 편집을 맡았던 그는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을 계기로 일제에 전향한다. 국방헌금으로 거금 4,000원을 헌납하고 조선임전보국단 등 다양한 친일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영타도 및 징병권유 연설을 하고 다녔다.

1954년 호헌동지회에 참여한 후 민주당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1958년 4대 총선 때 서울 중구에서 당선돼 1960년 재선되었다. 장면 내각의 초대 부흥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을 잇달아 맡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계를 은퇴했으나 1966년부터 경제과학심의회 상임위원, 대한해운공사 사장, 한국능률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지내며 군사정권과 타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문학 부문에 포함되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박제환 장관은 서울 수하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3·1운동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퇴학당했다. 이후 휘문고보를 거쳐 1929년 일본 도지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관리 채용 시험에 합격해 귀국했다. 함경북도 나남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다 일본 유학 중 인정식(고려공산청년회 간부)을 도와준 죄명으로 체포되어 7개월간 복역했다. 1932년 고향인 부천군 사회과 주사로 조선총독부 관리생활을 다시 시작해 이후 경기도 진흥계와 부천군 산업과장 등으로 일했다. 광복 후에는 경기도 식량과장과 부천 한강수리조합장을 역임했으며 1949년 공립 부천농업중학교를 설립했다.

2대 및 5대 총선 당시 부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장면 내각의 농림부장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1992년 출간한 회고록 <지봉한담>에 “나는 내 인생의 꽃다운 한때를 일제의 앞잡이로 보냈던 것을 깊이 참회한다.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 이러한 나의 참회의 마음이라면 제헌국회 출마를 자제해야 했던 것이다. 새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같은 때 묻은 사람이 나서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였다.”라고 적었다. 그나마 생전에 자신의 친일 행적을 참회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이상과 같이 장면 총리의 1차 내각은 총 15명 중 정일형 외무부, 홍익표 내무부, 신현돈 보사부, 정현주 교통부장관 등 4명을 제외한 11명이 친일인사였다. 3·15 부정선거에 맞서 피를 흘린 4·19 혁명의 결실을 사실상 민족반역자들이 강탈한 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4·19 혁명 56주년이 다가오는데 4·19 혁명과 독립운동에 바친 영령들을 빛 내지 않는다. 

삼일운동이 아니라 삼일항쟁이다



배 다 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삼일절을 앞두고 경향 각지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삼일 항쟁’의 열을 빠르게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어느날 <한겨레>의 ‘아침햇발’ 칼럼 ‘아직, 친일파의 나라’를 읽던 중에 문득 식민사관의 문제가 떠올랐다. 일제 패망 7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친일파의 나라”라는 표현에 찬사가 앞서는 오늘의 역사 사실이 서글프다.

그 칼럼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도 부친의 친일 전력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친일인명사전> 보급에 정부가 훼방을 놓고 있는 이런 나라 꼴이 되었고, 일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해결” 같은 굴욕적 합의가 나온다고 탄식한다. 나는 이 한심한 사실들이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이 역사교육의 바탕이 되고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민사관의 문제야 역사교육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깔려 있는 현상이지만, 삼일절이 다가오기에 나는 이 삼일운동론의 식민사관 문제만을 제기해본

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기미(1919년) 민족항쟁을 ‘삼일운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기미년 3월1일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시작으로 울려 퍼진 항쟁의 기세는 장엄했다. 기록에 따르면, 3월1일에 시작한 반제 항일 민족항쟁은 4월말까지 이어졌다. 항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연 1500회의 시위 항쟁에 참가한 인원은 200만에 이르렀고, 사망자만도 7509명이었다. 부상자가 1만6000명에다, 피검자도 4만6900명이었다. 조선 독립을 위한 싸움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우리 겨레의 얼이 묻어 있는 증좌다. 그 항쟁 속에서 침략 억압의 첨병인 경찰 헌병관서의 습격이 159회, 일반관서 습격이 120회, 일본관헌 사망자도 166명이었다.

그야말로 피나는 투쟁이었다. 동학농민항쟁을 능가하는 대항쟁이었다. 이를 ‘삼일운동’ 정도로 표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것이 바로 식민사관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1919년 이후 1945년 8월15일까지의 26년 동안은 식민통치 기간이라 그렇다 쳐도 일제 패망 후 7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삼일운동 표기가 문제로 제기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학계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이선근, 이병도 교수 등 우리 사학의 대가들이 이끌어온 학풍이 “아직도 친일파의 나라”에서 행세하는 대가답게, 그 맹렬했던 항쟁의 기세가 민족자주에로 승화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기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장엄한 민족항쟁을 ‘운동’으로 폄하하지 않는 후학은 주류에 들지 못했다.

일본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우리 민족이 저항했던 이 자랑스러운 역사, 세계사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 항쟁의 역사를 스스로 폄하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계가 긴 동면에서 깨어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미 민족항쟁의 역사를 바르게 쓰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 위 글은 필자의 동의 하, 2016년 2월 25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청년 대학생이 만드는 역사



성 희 연
청년독립군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지금, 청년독립군이 필요하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라는 20대 대학생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조사기관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대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광복연도를 언제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정확히 응답한 비율은 74.0%. 반대로 생각하면 대학생 4명 중 1명(26.0%)은 광복연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친일파에 분노하고, 친일청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다면 나라를 지키는 독립군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영화 <암살>의 흥행과 MBC 예능 <무한도전>의 우토로 마을과 군함도 특집이 젊은 세대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청년들이 ‘역사지식’ 수준은 낮지만 ‘역사의식’ 수준은 높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지금의 시대정신은 ‘역사’이며, 청년들은



▲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위한 피켓제작 중

분명히 우리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큰 울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복 70주년인 작년 일제강점기 나라의 광복을 위해 일본과 친일파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난 옛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청산되지 못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청년독립군’이라는 이름의 대학생·청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저희 청년독립군에게 2015년 하반기는 매우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와 한일 ‘위안부’ 협상까지 역사가 역행하고 역사정의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모인 청년독립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국정교과서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작년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발표한 날 저를 포함한 17명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 국정교과서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을 인지한 많은 단체들이 여러 차례 국정교과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학생, 청년학생들이 행정예고발표가 예정된 12일 전날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철야노숙농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비웃듯,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발표했고 농성에 참여했던 대학생들 중 일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 10월12일 황 장관의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직후 대학생들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국정교과서 반대구호를 외쳤다.

이순신 동상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동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무섭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막상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스스로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면회 온 후배들이 저희가 연행된 다음날 연세대 교수님들께서 ‘광화문에서 잡혀간 대학생들을 보면서 집필거부를 결심했다’는 시국선언을 하셨다고 얘기해줬을 때,



▲ 소녀상 옆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청년독립군 회원들



▲ “소녀상을 건드리는 자 친일파대!”

우리들의 행동이 사회에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는 ‘유치장에서 나간 후에는 어떻게 싸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후 유치장에서 나오니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거세졌고, 그에 힘입어 청년독립군도 역사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하는 동시에 매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하고, 지하철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정교과서 보다 더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새해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에서 ‘극적 타결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도하기에 정말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해야 10억 엔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한일협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몇 개의 대학생 단체가 모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를 꾸리고 12월 30일 수요시위가 끝나자마자 소녀상 이전을 반대하며 소녀상을 곁을 지키는 노숙농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불을 들이는 것을 막아서(이유는



▲ 역사학습단 워크샵에서 이만열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을 듣는 청년독립군 회원들

지금도 모르겠지만!) 이불 때문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기상천외한 일도 겪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학생들을 응원해주는 덕분에 지금은 경찰들도 대학생들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청년독립군은 계속된다!

지난 1월 청년독립군은 ‘역사학습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역사를 배우고 싶은 대학생들을 모아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사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1박2일 워크샵에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동안 배웠던 내용을 워크샵의 강연을 통해 정리했는데, 강연에는 독립기념관의 연구소장이신 국민대 장석홍 교수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잘 접할 수 없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의 운동을 전공하신 동국대 전명혁 교수님, 소설가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청년들이 의미있는 일을 한다며 저희를 좋게 봐주시고 열정적으로 강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참가한 친구들도 모두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고 했던 목적들을 성취한 것 같고 여기서 배운 올바른 역사를 주위에 널리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독립군은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콘텐츠를 대학생,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2030세대들이 역사를 더 이상 지루하고 고루한 것, 구식의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역사단체로 우뚝 서서 기성세대가 주를 이루는 역사단체계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2016년 저희 회원을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청년들에게 역사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하며 저희가 맺은 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백범의 정신을 계승하여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백범독서회’라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3~4월에 진행하는 백범독서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젊은 청년들을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

-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Minjokuniv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2-406-283 (예금주: 민족문제연구소)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청년독립군의 활동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저희 활동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대학생들의 순수 회비로 운영하다보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청년들이 활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 1월에 진행한 역사학습단

‘사드’ 말고 ‘평화’를



조 회 환
한국외대 명예교수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격원리에 의하면, 적의 미사일이 대기권 밖의 고공으로 치솟다가 차츰 하강하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지상고도 150km-40km 구간을 하강할 때 고고도 요격미사일로 격파한다는 것이 ‘사드’ 미사일이다. 이 체계의 중요핵심 기능은 두 가지 인바, 하나는, 적국 미사일의 발사 순간을 탐지하는 레이더 (AN/TPY-2, X밴드레이더) 기능이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0km 정도로 중국의 동·중부일대의 군사동태를 탐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한다. 또 하나는 탐지된 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요격미사일을 연발로 또는 집중적 다발로 발사하여 적 미사일을 격파(hit to kill)한다는 이론이다. 또 ‘사드’가 고고도에서 요격에 실패하면, 2차적으로 고도 30km-15km 구간을 하강할 때 저고도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임)

그런데 이처럼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고 궤적을 ‘추적’하여 ‘격파’하는 효율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관심가들이 의아심을 품고 있다.

첫째, ‘사드’의 요격능력을 의심한다. 미사일 분야 선진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미사일의 비행속도를 초고속화(마하 10 이상)하거나 별도의 회피기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 무슨 묘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윌리엄 페리 전 미국국방장관도 최근 영국을 방문하던 중 ‘사드’에 대해 언급하기를 “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돈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실토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일방적인 MD설치가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관계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양심적이고 권위 있는 미사일방어전문가이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교수 시어도어 포스톨 박사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미국은 이라크전쟁 때 패트리엇(PAC-2,3)으로 스킵드 미사일을 80% 요격했다고 주장했지만 80% 요격설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거의 요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나 군 당국은 한국정부나 다른 구매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드’의 성능실험도 의문투성이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미국 해당기관에서는 몇 차례의 성공영상을 공개했으나 그것은 마치 약속된 공격에 약속된 대응을 하는 약속대련방식의 실험이었다. 막상 예상 못한 방향에서 예상 못한 시간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적의 미사일이 날아 올 때 그 명중률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자신도 대답한바 없다. 국외 자로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적의 미사일이나 요격미사일이나 셋팅이 이고, 설령 미사일의 부피가 꽤 크다고 해도 실제 미사일 내부 탄두의 크기는 1-2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당히 큰 부피이지만 그것이 100리 내지 400리 상공의 광활한 공간에서, 마하 10 안팎의 속도로 날아가는 것을 요격한다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정도 그 이상의 신기(神技)라야 할 터인데 과연 가능 하겠는가?

또 포스톨 교수에 의하면, 미사일을 쏘 때 가짜인 기만탄(Decoys)을 쏘 수도 있고, 미사일에 자체 폭발장치를 해두면 하강 시 자체 폭발한 몸체의 파편과 탄두가 함께 나날 때 ‘사드’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이 진짜 탄두인지 기만탄두인지, 또 탄두인지 몸체 파편인지, 또 요격미사일에 장착하는 적외선 센서가 목표미사일의 내용물을 식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헛되어 요격소동만 벌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냉철히 생각해 보면 혹 미사일 열 발 중 한 발쯤 요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미미한 요격의 가치가 무어 그리 대단하냐 하는 것이다.

셋째, ‘사드’의 가격이 엄청 비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드’ 포대 한 세트 가격은 1조 5천 억 원 또는 2조원이라 한다. 또 설치 세트 수도 2세트 또는 3세트 설이 나돈다. 거기에 연간 한 세트의 유지비만 3조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다. 그다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 한발을 막기 위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다량의 요격미사일을 구입하여 발사해야 된다.

그 비용은 정말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부지와 운용만 책임지고 ‘사드’를 구입하는 것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겨우 구입비만 감면되고 기타의 더 엄청난 비용은 우리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원래 외국군의 ‘주둔(駐屯)’이라는 말은 빈손으로 와서 머문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들 무기를 가지고 와서 머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가져와서 설치하고 운용비와 부지 사용료도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한국은 해마다 미국에 막대한 주둔비를 지불하고, 전투기 등 그때그때 필요한 신무기도 구입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우리의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구가 거기에 그칠 것인지는 의심이다. 사실 미 육참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2014년 11월 당시 국방장관에게 메모를 보내 요격미사일개발과 구매비용이 부족하고, 잠재적 적국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강해지니 개발중단을 건의 한 바도 있다. 또 실제로 필립 코일 전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한국·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넷째, ‘사드’를 둠으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오끼나와 미군기지 반대운동가 오완 무네노리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군사목적보다는 정치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즉, 요격 장담에 대해서는 대단한 걱정이 아니지만, 중국의 군사적 동태를 ‘사드’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도 싫지만 요격미사일 포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국을 향한 공격미사일포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감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사드’는 경계(울타리)를 고착시키는 대말뚝이 되어 한국은 미국의 울타리 안으로 자동 편입됨과 동시에 중국과는 적이 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 지도층은 국가주석과 기타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 측 상대를 만나면 ‘사드’를 받아드리지 말라고 부탁하였기에 ‘사드’ 배치론이 구체화되자 중국 측은 드디어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고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은근히 위협적인 시위도 했다.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노태우 정부 때 결실을 거둔 ‘북방정책’에 중국과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호응해옴으로서 우호 협력국이 되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까지 차질 없이 평화와 협력이 지속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군사 동맹’이라는 단 한 가지 명분에 잡혀 중·러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송두리째 팽개치면 되겠는가? 중국의 경고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과 국제관계를 경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와의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돈벌이 기회를 주었던 중국과 경제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더군다나 ‘사드’ 때문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될 우려에 설상가상의 악수(惡手)가 되지 않겠는가?

다섯째, ‘사드’를 설치할 개활지 선택도 문제가 된다. 설치지역은 최소한 14.4만 m² (축구장 20개 정도)의 넓이여야 하며, ‘사드’의 레이다가 가동되면 엄청난 저주파(전자파)가 웅웅거려서 주변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100미터 거리만 떨어져 있으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며 가장 정확 시 되는 주장에 의하면 최소한 반경 3.6km를 벗어난 주변지라야 무해하다고 한다. 전자파로 유해한 ‘사드’를 비좁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점에 둘 것인가? 국민의 반대가 엄청날 터인데! ‘안보’라는 상투적인 명분으로? ‘강력한 지도력’이라는 위세를 보이기 위해서? 또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등으로 밀어 붙일 것인가?

여섯째, ‘사드’의 요격기능이 미약할망정 막상 전쟁이 발발 되면 ‘사드’ 시설이야말로 첫 번째 격파의 대상이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북한도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것이 ‘사드’ 시설이다. 사람들이 곰이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곰의 쓸개를 얻으려다 보니 곰이 죽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꼭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동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전략에 방해가 되는 ‘사드’를 처치하려다보니 ‘사드’ 인접지역민을 죽이게 되고 드디어는 한·중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꼭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에 대결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갖다 놓은 전쟁무기가 중국의 공격을 유발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은 한·미·일 3국 연대라는 최전방 경계지대에서 자연히 최선봉 돌격대가 되고 동시에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돌격대이며 누구를 위한 총알받이 일까? ‘사드’는 이래서 우리국민에게는 크나 큰 흉기(凶器)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미군이 주둔한지 벌써 71년으로 접어들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때로부터 일제 40년의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미국이 고마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일 간의 밀약(1905.7.29)이나 남·북한 분할 점령을 먼저 소련에 제안하여 분단이 성사되었으며, 그 뒤 많은 비참한 일들이 분단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는 원죄(原罪) 의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마 그 보상(?)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 만이라도 이만큼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해주었으니 그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 간 이진 국가 간 이진, 그리고 장기간의 거래일 수록 계산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에 미군의 장기주둔은 온당한가.

6. 25전쟁 이후 북한 지원군인 중국군은 휴전이후 오래지않아 철군했지만 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과 접경되어 유사시 즉시 출병할 수 있는 위치인데 반해 미국

은 멀리 있어서 중국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이유가 있으니 어느 정도 수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계속적인 세계제패를 위해서 주둔하는가? 또 지금에 와서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위해서 주둔 한다면 한국 안보목적과 세계 제패목적 양자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가? 필자가 보기에는 세계 제패목적이 훨씬 크다고 본다.

포스톨 교수도 ‘사드’ 포대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의 일부(부속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 미사일 방어(MD)체계의 일부이다. 특히 프랭크 로즈 미국무부 차관보는 2015년 5월 19일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주둔을 고려중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 전 세계 양심적인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한국 안보 보다 미국안보와 미국의 세계제패목적이 더 크다는 필자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은 필자의 말을 수궁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여유도 있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일제 치하에서처럼 혹사당하거나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죽어가는 처지는 아니지만, 만약 남·북간에, 또는 미·중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기가 발달된 지금에 와서는 옛날 일제에 끌려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한국 사람이 죽고 불구자가 되고 피난민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한반도와 황해바다는 죽음의 피바다가 될 것이며, 미국의 협력 덕분에 이룩한 문명의 성과물들도 순식간에 폐허가 되지 않겠는가?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한국주둔을 고집한다면 약소한 우리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인들 감히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국군의 장기 주둔과 전시 작전권까지 미국에 위탁(?)한 한국의 국민적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손상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생각해보았는가? 여기까지도 양해하더라도 다시는 우리 국민을 남의 전쟁놀이에 끌어드리는 일은 없도록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주둔을 부탁하고 싶다. 어느 주권국가가 전시작전권을 계속 외국에 넘기면서 70년이 넘도록 주둔을 허용하겠는가? 미군이 없으면 남한이 적화된다고? 그러면 왜 남한의 국력이 북한보다 40배나 강하다고 말했나? 실제로 남한의 무기나 군대의 전투력이 훨씬 강하며 그러한 자부심도 있지 않은가. 정부와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빈곤하고 후진적인 참상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필요하면 상습적으로 북한을 호랑이로, 남한을 개돼지 정도로, 왜소화시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기 바란다.

둘째, ‘한·미동맹’을 선용하자

‘동맹’이라는 굴레 때문에 안보문제에서 정신적으로 미국의 볼모처럼 잡히거나 또는 자진하여 미국에만 밀착해 있으면 국가안보는 안심해도 될 것이라는 숭미주의자들이 상당히 많

다. 숭미주의자 또는 미국을 잘 아는 지미파들의 생각에도 공감할만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부강국이라고 믿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이라는 남에게 과중한 의지와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응석을 부리는 어린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강대국들은 그 강함 속에 약함이 있고 그 부유함 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지구상에 영원한 강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현명한 사람이나 지도자들은 다 안다. 그래서 혹 악하고 호전적인 히틀러 같은 악독정치인은 아주 희소하고,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나 국민들은 부전평화(不戰平和)를 바란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들이 오르려거리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 열렬하게 평화를 갈구해야 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역경을 뒤집어 세계평화의 선봉대 겸 중심국이 되어야 한다. 과격하고 호전적인 말들은 자멸을 부르는 순간적 만용이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남도 죽이는 재앙임을 망각한 소영웅적 흥분일 뿐 진정한 용기는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도 미 국무부 러셀 차관보는 한국이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해상분쟁에도 미국편을 들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MIT대학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협상타결을 발표하던 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위해 ‘평화와 건설을 위한’ 호혜적인 동맹국이 되어주기 바란다. 미국과의 국력 차이가 수 100대 1 정도도 못되는 빈약한 북한을 무서운 듯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은 한사코 반대하여 계속 한반도에 긴장의 불씨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자꾸 새로운 전쟁의 불안과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드리지 말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기 바란다. ‘무기의 최선진’을 자랑하는 미국은 꼭 한국 땅에 ‘사드’를 두고 싶다면 차라리 동해바다의 이지스(Aegis)함 상에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렵다면 SM-3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배치하면, 미사일 요격에서는 한국배치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대신 한반도의 참화는 막아주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겠는가.

셋째, 아시아의 평화정착이 급선무이다

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국 주변의 강대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데서 유지된다. 그 점에서 한반도는 세계최대의 군사력이 충돌할 수 있는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죽겠는가? 그것도 수백 만 명 내지 수천 만 명 규모로! 국토는 초토화될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친하기로 말한다면, 중국은 천년의 친구이고 미국은 백년의 친구이다. 지정

학적인 이유를 미국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특성을, 세계경영자인 미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경영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일본과만 친하지 말고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하여 아시아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세계경영자의 핵심과제이고, 한국을 돕는 ‘동맹국’의 ‘최선의 사명’이며, 모든 나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자

우리 정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실세 지도층에게 부탁하고 싶다. 조선왕조 때 광해군은 중립적인 외교에 능하여 전쟁을 예방했으나 인조는 완고하고 서투른 일변도 외교로 전쟁을 유발하여 수십 만 백성을 죽거나 처참한 굴욕을 당하게 했다. 이성이 부족한 왕 한사람의 가벼운 감성 때문에 온 백성이 죽게도 되고 살게도 된다는 사실! 정말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최고 최선의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국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살아야 ‘국토’도 살고 그 토대에서 ‘정부(주권)’도 꾸려져서 ‘국가’가 된다. 따라서 ‘국민을 아끼고 국토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확실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이나 견해에 대한 충성을 ‘애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당당한 국민임을 포기한 기계의 부속품이거나 노예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영원한 평화는 미군의 주둔이나 미국의 최신무기가 확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그것을 토대로 한 평화통일에 있다. 미국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부추겨주고 알선 해주는 것이 강대국으로서의, 동맹국으로서의 최대 위업이고,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한국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도움이다. 1960년 위대한 ‘사월 민주혁명’ 직후 국내 지식층에서 통일 논의가 한창일 때 미국 상원의원 스피드(Mansfield, M.J.)는 한반도의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지금도 국내의 많은 지식인은 물론이고, 양심적이고 공정한 미국의 지식인들도 우리가 불편부당한 중립노선을 추구하여 자주국가가 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동맹국인 미국과 선린국인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차츰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기를 기원한다. 

혁명의 강물에 뛰어든 “김알렉산드라”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우랄산맥 타고 아무르강 절벽으로 불던
한줄기 바람이여
너는
끓어오르는 붉은 피 감추고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흘리던
혁명가 눈물을 보았느냐

빼앗긴 조국 산하를 어루만지며
동중철도 건설현장에서
우랄산맥의 황량한 벌목장에서

동포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던
조선의 혁명가 처녀를 보았느냐

이념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조선을 밝혀줄 횃불을 높이 들던
그 열정의 울부짓음을 들었느냐

아무르강의 바람이여
왜 침묵 속에 그토록 처절히
그녀가 죽어가야 했는지
말해 다오
말해 다오



▲조선인 혁명가로 러시아에서 이름을 날린 김알렉산드라 (그림 이무성 한국화가)

김알렉산드라 (1885. 2. 22 ~ 1918. 9. 16)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불어에 능통했던 김알렉산드라는 29살 되던 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짜르 당국이 우랄산맥 벌목장에서 일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이들의 통역을 맡았다. 1917년 2월 혁명 때 그는 강제 모집된 한국, 중국 노동자들과 우랄노동자동맹이라는 볼셰비키 조직을 만들었으며 1918년 초 하바로프스크에서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저명한 지도자이자 임시정부 초대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 등과 주축이 되어 한인사회당과 적위군을 조직했다. 그 뒤 1918년 7월 김알렉산드라는 하바로프스크시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시위원회 비서와 재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1918년 9월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에 붙잡혀 서른세 살의 나이에 순국의 길을 걷는다. 김알렉산드라는 처형 직전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눈에 봉대가 감겼는데 봉대를 눈에서 떼어내면서 자신이 사형당할 장소를 택하겠다고 말하고는 13발자국을 걸었는데 그 13발자국이란 다른 아닌 조선의 13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영화 <내부자들>과 <특종:량첸 살인기>, 진실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이 두 희
자유기고가

2015년에는 권력과 언론의 속성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두 편의 영화 <내부자들>과 <특종:량첸 살인기>가 개봉을 하였다. 우민호 감독의 영화 <내부자들>은 재벌과 정치인, 언론인으로 이루어진 부패한 권력 유착에 맞서는 괴짜 검사와 정치 깡패의 복수극을 이야기로 담은 영화이며, 노덕 감독의 <특종>은 우연한 기회로 연쇄살인사건의 제보를 받은 기자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며 벌어지는 코미디 영화이다. 두 영화는 비판적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은 권력의 실체와 그에 대한 폭로 과정을 중심 줄거리로 하고 있다. 정치깡패 안상구는 집권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와 재벌, 그리고 보수 신문사의 논설주간이 맺고 있는 유착 관계 밑에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안상구는 정치자금의 흐름을 밝힐 비자금 파일을 입수하고 이를 논설주간 이강희에게 몰래 건네주지만, 결국 그에게 배신당하고 손목이 잘린 채 버림받고 만다. 한편 배경은 부족하지만 검찰 조직에의 인정을 받고자 애쓰는 우장훈 검사는 대선을 앞두고 비자금 조사의 저격수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비자금 파일의 행방을 놓친 후, 이강희의 계략으로 강압 수사 논란에 휘말려 결국 좌천당하고 만다. 영화는 안상구를 찾아낸 우장훈이 서로의 목적을 위해 권력에 대한 복수 혹은 정의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 <특종>의 이야기는 이혼과 해고의 위기에 처한 기자 허무혁이 우연한 기회로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제보를 얻게 되면서 시작한다. 특종을 터트리며 순식간에 인정과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허무혁은 취재의 과정에서 자신이 발견한 증거가 사실 <량첸 살인기>라는 소설의 한 구절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계속하여 거짓 기사를 만들어보지만, 오히려 더욱 여론만 자극하게 되고 경찰의 수사에 쫓기기까지 된다. 하지만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 처한 허무혁에게 연쇄살인사건의 실제 범인이 접촉을 해오면서 영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된다.



▲ 영화 <내부자들> 중에서





〈내부자들〉은 흥미로운 소재와 이야기로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묘사가 너무 많다는 반응도 뒤를 따랐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로서 표현의 수위는 어디까지나 연출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가 자신의 표현을 정당화하는 어떤 내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는 또 다른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에는 안상구가 손목을 잘리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을 비롯해서 특히 재벌과 정치가가 함께 난잡한 술자리를 벌이는 모습들이 특히 자주 나온다.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폭력성과 비도덕성이야말로 바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이러한 은밀한 장면들을 몰래 촬영하려는 주인공들의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여러 번 반복하고, 결국 영화의 결말에 가장 큰 복선으로서 역할을 한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 이 영화의 주제라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 안에서 언론의 역할과 사법기구, 정치적 대안세력들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에는 모두 부패하거나 무능한 것으로 그려질 뿐이다. 영화는 결국 해결책으로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폭로와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당한 권력의 실체를 그렇게 밖에 들추어낼 수는 없는 것일까. 혹은 과연 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시적이고 명약관화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민낯을 보고 밝혀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은 이 영화에서 어느 순간에 조급한 관음증에 가까워지고 만다. 사실 우리의 이러한 욕망은 권력에 대해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서 많은 부분 기인할 것이다. 옳지 못한 권력은 항상 일방적이며 불투명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자신의 동기를 은폐하며 그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나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속 시원한 폭로를 바라기도 한

다. 하지만 권력의 가시적인 실체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것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쉽게 다룰 수도 없지만, 유혹에 빠지고 부패하기 쉬운 권력의 위험성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는 마땅히 공론의 장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영화 〈특종〉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보다 희극적으로 그려진다. 애초에 허무혁 기자가 잘못된 제보를 얻는 계기는 우연한 사고에 불과했지만, 그러한 해프닝조차 개인의 절박함에서 시작하였으며, 시청률에 안달이 난 방송국의 사정과 함께 제대로 된 단서 없이 여론에 몰려 갈피를 못 잡던 경찰 수사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결국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단면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하지만 〈특종〉의 이야기가 더욱 대담해지는 부분은 진짜 연쇄살인범이 나타나 주인공과 조우한 이후에 일어난다. 주인공이 마지막 희생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정체는 엉뚱하게 용감한 시민으로 오해되고, 진범의 존재는 영영 미스터리로서 남고 만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희생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목숨을 구하였으며, 연쇄살인범은 그 죄 값을 치룬 셈이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정치권의 또 다른 사건으로 옮겨가버렸고, 오직 허무혁 자신만이 진실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을 얻으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영화학자 앙드레 바쟁이 말한 희극의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떤 가벼움을 긍정하는 것과 통하고 있다. 즉, 이 모순적인 세상을 절망이나 비극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영화 〈특종:량첸 살인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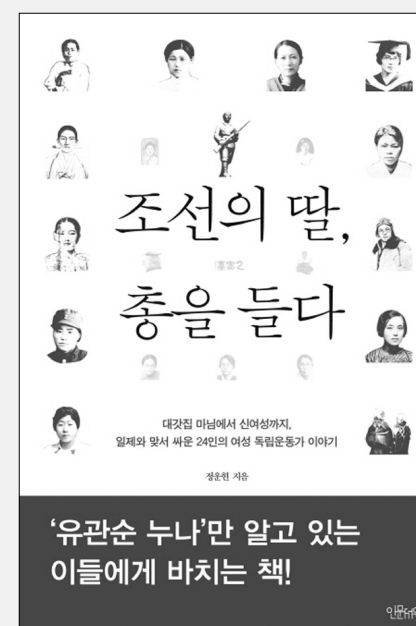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내부자들>보다는 <특종>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부자들>의 경우 우리를 당장 당사자로서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를 채근하는 듯하다. 장르 영화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3시간에 달하는 상영시간은 그러한 긴장감마저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내부자들>은 설명적인 장면이 많이 빠진 2시간 분량의 개봉판과 감독이 재편집한 3시간의 오리지널 판으로 나누어 배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재편집이 관객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었을까. 때로는 진실에 대한 갈구는 끝없는 갈증만을 낳는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든가 실체적 진실 등 자꾸 더 많은 수사를 붙인 진실을 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선에 대한 욕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바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는 눈을 통해 보지만 때로는 관객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도 있다. <특종>의 결말이 관객에 따라서 다소 개운치 못하고 찝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쉽게 진실을 꺼내놓기보다는 과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

-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 지은이 | 정운현 • 출판사 | 인문서원 • 쪽 수 | 292쪽



치마를 두른 독립운동가들,
여성의 이름으로 조국을 찾겠노라!

물론, 여성도 독립운동을 했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다 옥중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 이외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가? 매국노, 하면 이완용 밖에 모르듯이,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평생을 바쳐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대열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24인의 삶과 행적을 복원한 책이다. 대갓집 마님에서 최고의 신식교육을 받은 엘리트 신여성까지, 오로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조국을

찾겠노라 치열하게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 24인의 아름답고 용감한 삶, 용감해서 더욱 아름다운 삶을 들려준다.

어머니의 만세,
그리고 딸들의 만만세

김락, 이화림, 남자현, 정정화, 동풍신, 김마리아, 박자혜, 박차정, 조마리아, 안경신, 권기옥, 부춘화, 김향화, 강주룡, 윤희순, 이병희, 조신성, 김알렉산드라, 오광심, 김명시,



정철성, 방순희, 이희경, 주세죽.

우리는 안중근, 김구, 신채호, 윤봉길, 이봉창의 이름은 알지만 이들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신채호 선생의 아내 박자혜,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도운 백범 김구의 비서 이화림.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나 아내이기 이전에 이미 ‘치마를 두른’ 독립운동가였다. 그들은 만주 벌판에서 장총을 들고 직접 일제와 온몸으로 부딪쳤고, 총독을 암살하겠다고 권총을 들고 나섰고, 일제 식민지배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을 던지고, 비행기를 몰고 가서 일본 왕궁을 직접 폭격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행사가 되었다. 그뿐인가. 이역만리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일당을 기꺼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고, 아버지의 시신을 곁에 두고 벌떡 일어나 목이 터져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밤의 국경을 넘나들고, 국채를 갚기 위해 갖고 있는 소소한 패물들까지 기꺼이 내놓았다. 탄약을 만들어 제공하고 독립운동가들의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살림을 챙겼다.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나긴 옥살이를 하면서도, 심지어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던 오직 한 가지 생각은 ‘대한 독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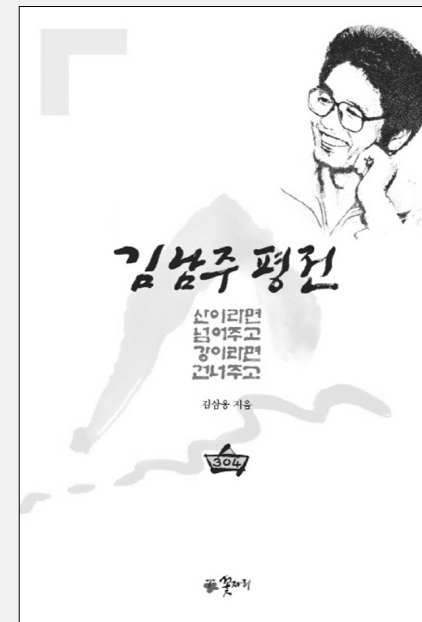
꽃 대신 총을 든 여성, 그들을 기억하라

무엇이 ‘꽃’에 비유되곤 하는 가냘픈 여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치열하게, 이토록 당차게 한길로 달려나가게 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꽃’ 대신 ‘총’을 들게 했을까? 『조선의 딸, 총을 들다』를 읽다보면 ‘못난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음을 알게 된다. 엄혹한 시대가 오히려 여성들이 펼쳐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구한말의 양반가 며느리들은 ‘충효사상’에 입각하여, 근대의 엘리트 신여성들은 ‘인간해방’을 꿈꾸며 그렇게 ‘인간의 길’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숨은 희생이 있어 우리는 가슴 벅찬 광복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100여 년 전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다 스러진 불꽃같은 청춘들, 용감해서 더욱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는 ‘독립운동=남자’라는 무의식의 편견을 시원하게 부서뜨리면서, 치열해서 더욱 빛나는 어제의 청춘들 이야기를 21세기 오늘의 청춘들에게 오롯이 들려 준다.



김남주 평전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꽃자리 • 쪽 수 | 488쪽



김남주의 시 100여 편과 함께
물 흐르듯이 펼쳐지는
결코 묻힐 수 없고
묻혀서는 안 될
김남주의 마음 아린 생애

김남주 시인은 감옥에 있을 때는 주로 저항시를 쓰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정시를 많이 쓴 보기 드문 시인이고 투사였다. ‘투사시인’이었다. 전봉준의 혼(魂)을 닮고, 브레히트의 백(魄)을 닮고자 한 시인이었다. 그가 닮고자 했던 그들의 운명이 어찌되었는지 따위는 계산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쓴 시는 밖으로 흘러나와 봄이 와도 움츠리고 있는 자들의 채찍이 되었고, 겁 많은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었다. 시위대의 노랫말이 되기도 하고, 대학가의 ‘불온유인물’이 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가 없었으면 우리 민족은 혼백이 없는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군사독재 시대에 김남주 선생 등의 저항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의기가 없는 국민으로 낙인되었을 것이다.

시인 김남주는 왜 그리도 빨리 갔을까. 운동주 시인, 조영래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장은 왜? 독재자와 그 아류들, 빛바래지는 시인이자 작가들도 그리 장수하는데, 당신들은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왜 그리도 빨리 가버렸는가. 시인 김남주는 신화와도 같고 전설과도 닮은 사연을 남기고 떠났다. 부인 박광숙 여사와 아들 토일 군 얘기다.



시인의 표현대로 손목 한 번 잡아보지 않았던 조직의 동지가 15년 장기수로 선고 받은 남자의 연인이 되어 옥바라지를 자원하고, 출옥한 후에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이 땅의 노동자들도 금, 토, 일요일에도 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이름을 토일(土日)이라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 점 혈육을 아내에게 맡긴 채 감옥에서 나온 지 5년 만에 저승으로 가버린 가슴 아픈 이야기. 김남주 선생과 박광숙 여사가 남긴 이야기는 21세기로 이어진 20세기 한국판 순애보라 하겠다.

지금 한국사회는 대명천지에 수십 년 전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악령들이 돌아와 활개를 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가 염원하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날들은 아득한 과거가 되었다. 목숨 걸고 싸우며 일궈놓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망가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시인이 살았던 70-80년대가 차라리 낭만적이었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맨다. 직장인은 언제 쫓겨날지 몰라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파리 목숨이다. 단 몇 퍼센트의 부자들이 부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다. 배가 가라앉아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살을 당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다. 불안을 마케팅하며 정권을 독점하고, 부와 명예, 모든 기득권을 싹 쓸어 가려는 자들이 벌이는 음모로 세상은 아수라장이다.

이제 다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죽기 살기로 버둥거리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기력도 없이 망연자실 뉘를 놓을 뿐이다.

몽둥이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다시 돌아온 탓인가 보다. 서북청년단이 재건되었다고 하면서, 게거품을 물며 사람들에게 색깔을 입히느라 정신없는 종편 방송을 들으며 시들을 읽노라니 80년대의 으스스한 공포가 실감나게 다가온다.

80년대에 쓰인 시들을 다시 찬찬히 돌아본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인’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꼬박 9년을 감옥에서 보낸 80년대였지만 말이다. 비록 육신은 간헐이었지만 시 정신을 한껏 태울 수 있었던 시기가 그때였다. 어떻게, 무엇을 쓸까, 하는 것을 고민할 겨를 없이 시는 꾸역꾸역 겨워져 나왔다. 술술 토해진 핏덩이 같은 낱말들은 그대로 시가 되었다. 몸통을 가득 채웠던 것들이 모두 토해져 나왔을 때,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의 머리엔 재 같은 하얀 백발이 얹혀 있었다.

**세상이 몽둥이로 다스려질 때
시인은 행복하다**

**세상이 법으로 다스려질 때
시인은 그래도 행복하다**

**세상이 법 없이도 다스려질 때
시인은 필요 없다**

법이 없으면 시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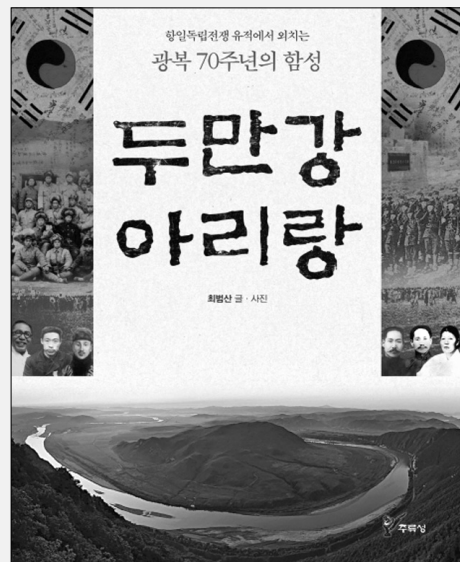




두만강 아리랑

- 항일독립전쟁 유적에서 외치는 광복 70주년의 함성

• 지은이 | 최범산 • 출판사 | 주류성 • 쪽 수 | 432쪽



광복 70주년,
광활한 만주벌판에서 외치는
겨레의 함성을 듣는다.

‘두만강아리랑’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총칼을 들고 싸웠던 항일독립전쟁(抗日獨立戰爭)의 기록이다.

두만강아리랑은 친일반역자들과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사라지고, 조작되어진 항일독립전쟁의 역사를 찾아내 올곧게 기록한 답사기이며, 지난 10여 년 동안 만주지역의 항일유적들을 답사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사실들을 진솔하게 써내려간

독립전쟁 성지순례기(聖地巡禮記)이다.

두만강아리랑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지난 70년 동안 역사 지우기에 의해 사라졌던 역사, 잊혀져갔던 역사를 다시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항일독립투쟁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분석, 각종 자료와 증언, 작가적 통찰을 담은 이 책은 항일유적답사를 떠나는 분들을 위한 자세한 지도와 수많은 현장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작가는 중국 동북지방의 항일유적을 답사하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때로는 신변상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다. 중국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동북지방 주민들은 작가의 유적답사를 극도로 경계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또한 광대한 만주지역에서 유적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작가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들 때가 많았고, 험준한 산골짜기 유적지를 찾지 못해 산중을 헤매다가 체력의 한계로 인하여 낯선 타국에서 몸져누웠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멈추지 않았다. 중국정부의 동북공정이나 도시개발 등으로 항일유적들이 언제 훼손되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작가의 발길을 재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며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겨울에 눈보라치는 유적을 찾아갔다가 눈길에 갇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지인들의 무관심과 주변인들의 냉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때였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후회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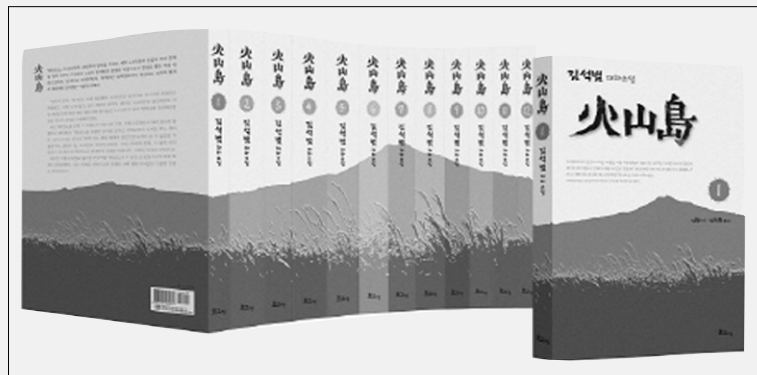
항일독립전쟁의 유적에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의 숭고한 발자취가 있었고, 암울한 시대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의 기상이 서려 있었다. 대한국민의 기개와 용맹이 빛어낸 불굴의 정신, 극한적 시대상황 속에서도 찬연하게 빛나는 민족혼불이 있었다. 어찌 하찮고 사사로운 어려움을 핑계로 항일독립전쟁 유적답사를 멈출 수 있었겠는가.



화산도(전 12권)

- 김석범 대하소설

- 지은이 | 김석범 • 옮긴이 | 김환기, 김학동
- 출판사 | 보고서 • 쪽 수 | 5488쪽



폭력적 탄압에 의해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해방 정국의 혼란한 상황을 재조명하는 시대의 증언록

“살육자들이 승리자가 되어 서울로 개선한 뒤,
폐허가 된 광야를 건너는 바람 속에 허무는 있는가?
섬을 뒤덮은 시체가 허무를 부정한다.
죽음의 폐허에 허무는 없는 것이다.”

역사의 격랑에 휩쓸린 민중의 슬픈 역사를 애도하는 장중한 진혼곡!

원고지 2만 2천 장, 20여 년에 걸친 집필 끝에 완성된 재일작가 김석범의 노작 『화산도 세트』. 80년대 후반, 전반기가 우리말로 옮겨진 바 있으나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이 소설을 오랜 기다림 끝에 동국대 일본학연구소장인 김환기 교수의 번역으로 만나본다. 제주 4.3 사

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48년 2월 말부터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주 빨치산들의 무장봉기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의 해방직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배경으로 야만적인 폭력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존엄 평화를 외치는 작품이다.

『화산도』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48년 2월 말부터 이듬해인 1949년 6월 제주 빨치산들의 무장봉기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의 해방직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의 주요 무대는 제주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서울과 목포뿐만 아니라 오사카와 교토, 도쿄도 비중 있게 등장한다. 빨치산들의 무장투쟁 자금의 유입 경로, 재일동포들의 실상과 일본공산당과의 관계 등이 일본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주인공 이방근은 독립 운동가였으나 전향을 약속하고 병보석으로 출옥한 인물로, 해방 후에도 친일파가 반공의 기치를 내걸고 득세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이방근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친일파 세력과 서북 청년단의 잔혹한 탄압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선 그들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대와 달리 제주 빨치산의 무계획적이고 무모한 활동은 수많은 제주 민중을 희생시키고 이방근은 더 깊은 허무와 절망감에 빠진다. 빨치산과 서북청년단, 친일파 경찰이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지옥도에서 이방근 역시 사람을 죽이게 된다. 친일파이자 제주 민중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 선 유달현과 정세용을 처단한 것이다. 이방근은 그들과 친척과 친구 사이였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타인을 죽이기 전에 자살한다.”는 소신을 깨뜨린 이방근은 끝내 자살을 선택한다.

일각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석범의 『화산도』는 제주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았으며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좇는 작품은 더더욱 아니다. 이 소설은 역사의 격랑에 휩쓸린 민중의 슬픈 역사를 애도하는 장중한 진혼곡이자, 야만적인 폭력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존엄 평화를 외치는 작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7주년 기념 사진전 <제국에서 민국으로>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7주년 기념 사진전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개막식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2관에서 열렸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인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현재 ‘3.1운동 100주년 기념조형물’과 임정기념관 건립추진사업에 진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전시회가 임정기념관 건립추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말해,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국절’에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아울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민족 구심점으로서 임시정부를 부각시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민주는 앞장서서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100년이 되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우리의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독립운동에 힘쓴 순국선

열·애국애민 정신은 다가올 통일조국 실현과 민주주의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해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한(韓中) 양국이 서로 돕고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중한 우호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원히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사는 임시정부가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벌였던 항일 운동을 언급하며 “양국은 일제강점기

의 암울한 시기에도 생사를 같이하며 서로 의지했고, 고난을 함께 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대사는 “중국 각지에 지금까지 보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는 양국 국민이 외세의 침략과 억압에 함께 대항하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생존을 도모했던 역사를 잘 증명하고 있다”며 양국의 유대를 강조하고 “양국 간 공동 이익과 공동의 책임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개막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역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을 기념해 장 크리스토프 랑젤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무관도 참석했다.

3.1운동 97주년 <겨레의 합창-333인 2016 독립선언>



3월 1일 낮 12시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중명전(重明殿, 사적 124호)에서 ‘3.1운동 97주년 겨레의 합창-333인 2016 독립선언’이 울려 퍼졌다.

덕수궁 중명전은 1905년 11월 18일 이토 히로부미 일제 통감의 고종황제와 조정 대신들을 군대를 동원-협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국권을 빼앗은 비운의 사적이다.

‘3.1운동 97주년 겨레의 합창-333인 2016 독립선언’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상임대표) 주최로 거행되는 의식은 사전 행사에서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은평 꿈꾸는 합창단, 6.15시민합창단 등을 중심으로 300여명의 각계 대표들이 ‘그날이 오면’, ‘솔아솔아 푸르른 솔

아’ 등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자주, 민주, 평화를 열망하는 겨레의 염원을 하늘에 실어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6.3학생운동의 주역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 차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전 총장 등 6.3세대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종찬 우당 이회영선생장학재단 이사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등 독립운동선양과 사회운동 단체 대표, 신경림 시인과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등 문화예술인, 이태진 교수, 이만열 교수 등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들 및 종교계, 언론계, 법조계, 노동·농민계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3월 1일 오후2시에 탑골공원 독립선언기념비 앞에서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열렸다. 제97주년 3.1절을 기념하며 거행된 이번 행사는 광복회와 (사)민족대표33인유족회가 주최하였다. 추념식에서는 유족들의 헌화 및 분향과 정유현 민족대표33인유족회장의 독립선언서 낭독,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많은 참석자들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희생선열들을 추모하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78주기 추모식



한국 임시정부 지도자이자 민족계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의 78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에서 열렸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국가보훈처장, 광복회원, 흥사단원,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878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안창호 선생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민족계몽운동과 국권회복 활동을 펼쳤다. 1907년에는 신간회를, 1913년에는 흥사단을 조직해 구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에 취임하여 연통제를 실시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안창호 선생은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병을 얻어 1938년 3월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6주기 추모식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원의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평화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6주년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1879년 황해도 해주 출신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하는 의거를 행한 뒤, 이듬해 뤼순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안중근 의사 가묘는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46년 백범 김구 선생 주도로 조성되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되찾아 오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11기 독립정신 답사단 영화 '귀향' 단체 관람



3월 11일(금) 용산에서 제11기 독립정신 답사단원이 모여 영화 '귀향'을 단체 관람했다.

'귀향'은 일제 강점기 광기 어린 일본의 만행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화를 다룬 영화이다.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의 군화발에 무지막지하게 짓밟히는 끔찍하고 비통한 역사로,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다. 제11기 독립정신 답사단원들은 다함께 모여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소감을 나누는 의미 있는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탄운 이정근의사 순국 97주기 추모제



3월 26일(토) 오전 11시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탄운 이정근의사 창의탑 앞에서 탄운 이정근의사 순국 97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탄운 이정근 의사는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로 재직하던 중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자 화성으로 낙향하여 팔탄, 우정, 장안, 정남, 봉담, 남양 등 7개면을 중심으로 인재 육성에 힘썼다. 이후 1919년 3월 31일 화성군 향남면 발안 장날을 기해 1천여 명이 함께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진두지휘했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탄운 선생은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들에게 투석으로 대항하였으며 일본인 순사부장을 해치웠다. 그러나 이날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찔려 56세로 그 자리에서 순국하는 비통한 일이 일어났다.

올해 순국97주기를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탄운 이정근의사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민족혼을 기리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6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창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권오영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학노	20,000	2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해원		30,000	이학호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향중	30,000	30,000
김광재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해준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률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흥관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석해진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송만섭	10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성곤	10,000	1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수옥	50,000	50,000	신흥범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심재권	30,000	3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영일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엄기남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염승훈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윤수	30,000	3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기식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오은주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영빈		5,000
김정록	70,000	7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상수	10,000	1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종성	10,000	10,000	유은숙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종준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판수	5,000	5,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낙현	5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의석	10,000	1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두엽		5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두희	30,000	3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황용만	5,000	5,000
노영택	10,000	1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황인자	30,000	3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훈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영국	10,000	1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일선	20,000	20,000			

2016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월	2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김판수		3,000,000
배양숙		1,0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⑰

3·1민족대표와 서대문형무소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집결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돌려보고, 한용운의 연설에 이어 만세삼창을 하는 것으로 끝났다. 민족대표들은 곧 연락을 받고 출동한 일정에 의해 모두 피체되었다. 일정에 끌려간 민족대표들은 남산 왜성대의 총감부에 구금되어 혹독한 조사를 받다가 일본군 헌병사령부 구치감에서 조사를 받고 5월 6일 모두 서대문감옥으로 옮겨져 독방에 수감되었다. 민족대표들을 악명 높은 서대문감옥에서 문초, 고문, 대질심문의 어려운 고비들을 겪으며 4월 4일 경성기방법원의 예심에 회부되었다. 민족대표들에게 일제는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목을 걸어 국사범으로 몰아갔다. 독립지사들이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는 계속되는 만세운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간인, 학생들이 잡혀 들어와 감방마다 아침저녁으로 만세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족대표들은 의연하게 수감생활을 하며 감옥 안에서도 시민,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존을 보여 주었다. 민족대표에 대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은 1920년 10월 30일 최종적으로 언도되었으며 보안법, 출판법 등의 죄명을 받아 1년~3년 내외의 형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민족대표들은 독방에 갇혀 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추위, 배고픔 등과 싸워야 했다. 이 같은 옥고로 양한문은 옥사하고 박준승은 옥중 고문으로 숨졌다. 그리고 손병희는 옥중에서 얻은 병으로 출소하였지만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송진우는 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어두운 지하실에 던져졌는가 하면, 사나움 개들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고 할퀴게 하였다.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이 3·1독립만세운동으로 표출되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큰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하지만 결국 일제를 상대로 주체적인 독립 쟁취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대중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었다. 종교계와 학생, 노동자, 여성, 농민들 이외에도 기생, 길거리의 걸인까지 참여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신분 등의 조건을 초월하여 대중적으로 확대 되었다. 참여계층의 다양화는 이념과 방법론이 다양화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의 가장 큰 결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외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직 발표되었고 같은 해 9월 상해에서 통합됨으로써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도 식민지국가들에서 비폭력운동을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택하는데 영향을 미쳤기에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고려해 볼 때 3·1독립만세운동은 실패한 운동이 아니며 독립에 더욱 근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시발점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대문형무소라고 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00年 편지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org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